주간브리프
WEEKLY ISSUE BRIEF
2026. 10. 26.
Vol. 42

세계 경제 동향

프랑스 국채금리 24년 만에 5% 돌파 ▌'26-10-19 Fortune; '26-10-20 France24; '26-10-21 Reuters

- 미·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진 가운데,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21일 5.002%로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
  -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9%에 달하는 가운데, 예산안 통과와 적자 감축에 난항을 겪고,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불확실성과 시위가 겹치며 금리 상승. 독일과의 금리차(150bp)는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 수준에 근접
  - 시위는 이탈리아·포르투갈·스페인·벨기에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,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농민들이 연료비가 2배 이상 올라 농기계를 운용하기 어렵다며 시위

❖ 높은 에너지 가격이 농가 부담 및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필요

국제유가, 브렌트유 5개월 만에 최고치 후 반락…중동 공급 불안 지속 ▌'26-10-22 NYT, Yahoo Finance

- 10월 22일 브렌트유(12월물)는 전일 대비 4.0% 오른 배럴당 113.17달러로 마감해 5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으며, 20일에도 장중 111.05달러로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
  -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에너지·공항 시설 공격 주장, 선박 18척 이상이 2주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짐.
  - 미국·이스라엘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 재공습 계획 보도,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지 않으며 "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" 대응하겠다고 발언

❖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과 유가연동보조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수준을 점검할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한은, 기준금리 3.00% 동결…"추가 인상 시기·속도 결정" ▌'26-10-22 한국은행

-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 기준금리를 3.00%로 동결(위원 7명 전원 찬성). 중동사태·주요국 통화·재정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 -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·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"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

❖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 차입 이자와 정책자금 금리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

9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.2% 상승…농림수산품 2.6% 상승 ▌'26-10-21 한국은행

-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는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동월대비 7.7% 상승). 농림수산품이 2.6% 올라(농산물 3.7%, 축산물 2.7%, 수산물 1.0%) 전체 상승 주도. 공산품은 보합, 전력·가스·수도는 1.3% 상승
  - 품목별로 배추(42.9%)와 쇠고기(10.4%)가 전월대비 큰 폭 상승. 전년동월대비로는 쇠고기 20.4%, 양우용배합사료 6.5% 상승한 반면 시금치는 19.3% 하락
  -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전월대비 1.1%, 신선식품은 4.1%, 에너지는 1.3% 상승

❖ 배추·쇠고기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의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, 소비자물가로의 파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OECD, 비료 시장 교훈 통해 농업 회복력·식량안보 정책 제언 ▌'26-10-19 OECD

- OECD는 10월 19일 정책브리프 「상호연결된 세계의 농업 회복력과 식량안보: 비료에서의 교훈」을 발간, 올해 상반기 중동 분쟁·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으로 비료 가격이 재급등해 농가 수익과 식량안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
  - 비료 가격은 작물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농가 수익을 압박. 상위 5개국이 2024년 질소비료 62%, 인산비료 74%, 칼리비료 84%를 생산해 공급이 집중되어 있으며, 걸프산 질소비료 의존도가 높은 수입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·남아시아에서 곡물 생산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분석
  - OECD는 공급선 다변화(공급국 수뿐 아니라 대체 운송로·선적 시기·공급원 전환 능력 고려), 정밀시비·토양검사·윤작 등 양분 효율화,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단기 지원과 수출제한 지양을 정책 권고함.

❖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료 원료 수입선 다변화와 정밀시비 등 양분 관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국회 농해수위, 농식품부 종합감사…농지 전수조사·농가소득 통계 쟁점 ▌'26-10-22 국회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2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와 후속 대책, 농가소득 통계 체계, 청년농 정착 지원,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등을 집중 점검
  - (농지) 야당은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ha에서 136만ha로 바뀌는 등 졸속 추진이며 농지 거래 급감과 감정가 절반 이하 낙찰 사례 등 매매 경색이 나타났다고 비판. 여당은 관행적·비투기성 위반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요구. 장관은 조사 목적이 농지대장 정보 현행화와 투기 근절이라며, 관행적 위반은 투기와 구분해 바로잡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답변
  - (농업소득)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2013년 29%에서 2025년 21%로 줄고 이전소득 비중은 36%로 늘어 농가소득 증가가 농업 경영성과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고, 2021~2025년 농가소득은 약 4,700만→5,400만 원으로 늘었으나 농업소득은 약 1,300만→1,100만 원으로 감소. 조사표본이 바뀔 때마다 농가소득 집계가 달라진다는 점도 거론되며, 97만 농가 기준 통계에서 184만 경영체 중심 지표를 분리할 것을 촉구. 장관은 행정데이터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
  - (청년농) 2021~2025년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1만 5,787명 중 영농 미시작 1,500명 이상, 중도 포기 474명 등 약 13%가 영농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고 지적. 청년농 참고인은 이자 포함 10년간 매달 270만 원 상환 부담을 호소하며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했고, 장관은 패널조사 중심의 정착 실태 파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
  - (산란계)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.05㎡에서 0.075㎡로 확대하는 기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, 2017년 확대 당시 약속한 시설보조 30%와 동물복지 직불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수입란은 사육밀도 검증 없이 난각번호 4번으로 유통됐다고 지적. 산란계협회장은 마릿수가 30% 이상 줄어든다고 호소했고, 장관은 기존 농가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한도 재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

❖ 농지 소유·이용 실태,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, 청년농 정착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·조사 체계의 개선 방안 검토 필요